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담당 : 빈곤사회연대 02-778-401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제 목 [보도자료] 송파 세 모녀 12주기 추모제 “가난은 죄송한 일이 아닙니다” 개최
날 짜 2026. 02. 26. (총 4 쪽)

보 도 자 료

송파 세 모녀 12주기 추모제

“가난은 죄송한 일이 아닙니다” 개최

이재명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공약 조속히 이행하라!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발굴, 빈곤층이 유물인가!

복지 AI도입이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답하라!

예산이 아니라 권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을 요구한다!

일시 장소 : 2026. 2. 26. (목) 10:30, 청운동주민센터 앞

1. 빈곤과 불평등 해결을 요구하는 본 단체들은 2014년 2월 발생한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래 빈곤과 장애로 인한 사회적 타살을 애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매년 송파 세 모녀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송파 세모녀법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세모녀의 죽음은 계속됐습니다. “죄송합니다”는 편지와 함께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떠난 이웃 송파 세모녀의 죽음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이후 정부와 국회는 ‘송파 세모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고,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소득이나 재산, 가족 또는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최후의 사회안전망조차 작동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현실은 12년이 지난 오늘도 가난한 이들의 삶을 비극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3. ‘발굴’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AI’가 아니라 ‘예산’이 필요합니다. 2017년 약속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여전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남아있으며, 완전 폐지 계획이 없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숨어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복지제도를 신청하려는 사람에게는 ‘예산이 떨어졌다’, ‘기준에 맞지

않는다' 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숨진 채 발견된 강남구 남성의 죽음은 '찾아도 지원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2024년** 위기가구로 선정되었음에도 동주민센터를 찾은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예산이 소진됐으니 내년에 다시 오라'는 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실효성 없는 발걸 대책이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포함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합니다.

4. 이재명정부의 '기본사회'에 가난한 이들의 기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긴급복지지원법은 12년 전에도 위기 상황을 여부를 가늠하는 자의적이고 복잡한 요건으로 인해 송파 세 모녀를 지원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와 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위기 사유'에 대한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변경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단절된 경우'를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절된 경우'로 바꾸고, 교정시설에 1개월 이상 구금 후 생계가 어려운자에 대한 지원을 6개월이상 구금으로 변경하는가 하면, 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 종료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1년에서 2년으로 바꿔 '복지 공백지대'를 넓혔습니다. 이재명정부의 '기본사회'는 고작 수개월에 불과한 임시적 지원 대책인 긴급복지지원제도조차 불허하는 사회인지 묻고 싶습니다.
5. 추모제는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의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기도와 발언, 공연, 결의문 낭독 후 대통령실에 질의서를 전달합니다. 빈곤과 불평등없는 세상을 기원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개요

- 제목 : [송파 세 모녀 12주기 추모제] 가난은 죄송한 일이 아닙니다
- 일시· 장소 : 2026. 2. 26. (목) 10:30 /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
- 주최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1부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기도회
 - 사회: 양한웅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 추모 기도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스님 및 참가자 일동
- 2부 : 추모제
 - 사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발언
 - 최인기 빈민해방실천연대 수석부위원장

- 추경진 수급당사자모임 ‘모힘’ 회원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 김명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추모공연: 민중가수 이해규
- 결의문 낭독 / 질의서 전달

- ▣ 붙임1 : 투쟁결의문
- ▣ 붙임2 : 이재명 정부 빈곤정책에 대한 질의서
-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발굴이 아니라 권리로, 관리가 아니라 연대로!
가난 때문에 죽지않는 세상을 향해 빈곤과 불평등을 철폐하자!

“죄송합니다”라는 편지. 마지막 월세를 남기고 떠난 송파 세모녀의 죽음으로부터 12년이 지났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의 죽음은 멈추지 않는다. 지역의 이름만 달라질 뿐, 수북이 쌓인 체납 고지서와 고독한 죽음은 반복되고 있다. 우리는 오늘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며, 더 이상 가난이 죽음으로 발견되지 않는 사회를 요구한다.

송파 세모녀 이후 정부는 사각지대를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찾아가는 복지를 강화하고, 정보를 연계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늘어난 것은 ‘발굴’이었지 ‘보장’이 아니었다. 수십만 명이 위기가구라는 이름으로 분류되었지만 공적 복지제도로 연결된 비율은 극히 낮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안정적인 보호를 받은 경우는 더욱 적었다. 발굴은 되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없었다.

문제는 발견이 아니라 제도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여전히 가족에게 가난의 책임을 떠넘기고, 근로능력평가는 사람을 줄 세운다. 기준중위소득은 현실의 물가와 삶을 따라가지 못하며, 급여 수준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재산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안전망에서 밀려난다.

정부는 또다시 더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AI로 위기를 예측하겠다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가난한 사람은 유물이 아니다. 발굴의 대상도, 관리의 대상도 아니다. 우리는 감시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 빈곤은 개인의 나태함도, 가족의 실패도 아니다. 불안정 노동과 낮은 임금, 쉬운 해고, 주거의 상품화와 의료의 시장화, 사회서비스의 축소와 공공성의 후퇴가 가난을 구조화해 왔다.

그렇다면 해법은 분명하다. 발굴을 멈추고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홍보가 아니라 예산을 확대해야 하며, 시혜가 아니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하라. 기준중위소득 현실화하고 급여 수준 대폭 인상하라. 주거·의료·에너지·돌봄을 상품이 아닌 권리로 보장하라.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중단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라.

우리는 빈곤 ‘문제’를 관리하는 사회가 아니라 빈곤을 발생시키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고립이 아니라 연대로 사는 세상,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야만 정책을 논의하는 사회가 아닌 세상을 요구한다. 송파 세모녀 12주기를 맞아 우리는 다시 다짐한다. 우리는 더 이상 슬픔에 머물지 않겠다. 기억을 행동으로 만들고, 연대를 통해 제도를 바꾸겠다. 문제는 발견의 실패가 아니라 기준의 실패다. 우리는 그 실패를 끝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발굴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다.

가난 때문에 스러져간 모든 이들의 영면을 빈다.

- 이재명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공약 조속히 이행하라!
-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발굴, 빈곤층은 유물이 아니다!
- 복지 AI도입이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응답하라!
- 예산이 아니라 권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을 요구한다!

2026년 2월 26일

송파 세모녀 추모제 참가자 일동

송파 세모녀 **12**주기를 맞은
이재명정부 빈곤 정책에 대한 질의서

1.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계획을 밝혀주시시오

- 문재인정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약속으로부터 9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 생계급여의 경우 2027년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에 대한 완전 폐지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만 발표되어 무척 미진하고, 생계급여 역시 완전 폐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 부양의무자기준은 과거엔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 요인이었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삶에 맞지 않는 ‘제도 지체’ 자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한바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제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계획을 밝혀주시시오.

2. 발굴이 아니라 제도개선, AI보다 권리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송파 세모녀의 죽음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변화는 ‘발굴’을 강조하는 정책흐름이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이를 대표합니다. ‘발굴’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이들의 죽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명합니다. 발굴하더라도 지원하지 않는 제도의 미비 때문입니다.
- 효과성 또한 확인되지 않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수집 정보 개수 확대(시행초기 13개 기관 23종의 정보에서 현재 26개 기관 47개 정보 수집), 수합된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보고 업무를 포함해 많은 자원이 집중되고 있지만, 조사에 따르면 발굴된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결된 비율은 4.3%(2022년)에 불과합니다.
- 더 많은 데이터나 AI 기술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발굴대상자 중 많은 수가 이미 ‘알고 있는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제도개선, 우선보장, 예외적 상황의 인정 등)의 부재입니다.
- 성과와 업무부담, 데이터 축적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고려할 때 발굴조사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정부는 현재 123대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AI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꼽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위기를 호소하는 주민에게 어떤 지원도 약속하지 않는 제도의 모순입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 방안을 묻습니다.

3.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악 철회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 2025년 3월 20일, 강남구 반지하에 살던 세입자 50대 남성 A씨가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강남구청은 한 해 전 A씨를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으로 선정하고, 자택을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A씨가 동주민센터를 찾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을 문의했으나 그는 예산이 소진됐으니 1월에 방문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1월 다시 주민센터를 찾았을 때는 5일 후 방문하라는 말만 들은 후 주검이 되었습니다.
- 실제 2024년 당시 기초법행동은 서울 25개 자치구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점검한바 있습니다. 11월 초 이미 4개의 자치구가 예산소진으로 신청을 받지 않고 있었고, 8개 자치구에서는 일부 급여, 혹은 제한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었고, 13개 구에서는 '시행중이나 곧 중단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12년 전에도 위기상황 여부를 가능하는 자의적이고 복잡한 요건으로 인해 송파 세모녀를 지원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와 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위기 사유'에 대한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변경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단전된 경우'를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로 바꾸고, 교정시설에 1개월 이상 구금 후 생계가 어려운자에 대한 지원을 6개월 이상 구금으로 변경하는가 하면, 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 종료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1년에서 2년으로 바꿔 '복지 공백지대'를 넓혔습니다. 또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위기 사유를 다르게 특정하고 있어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전	현행
더 까다로워진 위기사유	단전된 경우	<u>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u> 로 인해 단전된 경우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6개월이내 출소한 경우	구금기간이 <u>6개월</u> 이상이고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6개월이내 출소한 경우
재지원 기간	생계지원은 동일한 위기사유의 경우 1년, 다른 위기 사유의 경우 6개월 경과시 지원 가능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u>2년</u> 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 다시 발생 시 지원할 수 있음 <u>다른 위기사유라도 생계지원은 1년 경과시</u> , 주거·시설 지원은 3개월 경과시 지원 가능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서 주요 개정사항 중 후퇴한 내용

- 대구 불로동 아동의 사망사건으로 2005년 만들어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신청 후 선정까지 시간이 걸려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때문에 위급상황에 빠진 이들에게 48시간 내 선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예산의 한계와 까다로운 선정기준은 목표에 맞는 제도 운영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한시적 제도로

시작됐던 긴급복지지원법은 이미 시행 20년이 흘러 빈곤층 복지제도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자체에 살고 있는가, 예산이 소진되었는가에 따라 들쭉날쭉한 보장수준만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예산 부족에 따라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위기 사유 인정기준 역시 까다로운 명시적 요건을 충족할 때가 아니라 필요의 발생에 따른 원칙적 요건으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후퇴 철회와 개선에 대한 이재명정부의 방안을 묻습니다.

4. 빈곤정책의 투명성과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각 소위원회는 철저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의 자료라도 보려면 긴 정보공개 청구기간을 거치거나, 이마저도 한참 시일이 흐른 뒤에야 공개합니다. 회의 일정과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결정된 내용은 공표기간을 거치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안건을 검토하는지 알 수 없고,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도 없습니다.
- 중생보위의 이러한 운영방식은 우리나라의 다른 주요 회의와 비교해보아도 매우 폐쇄적입니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국민대통합 위원회 등 23개 회의는 속기록, 녹음기록 생산 의무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차관급 이상이 구성원이며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등 23개 회의 역시 속기록 작성이 의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복지제도의 기준선이 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과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사항을 다루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비공개에 부쳐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올해는 제4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수립을 시작하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해이지만 어떤 안건으로, 어떤 계획을 검토하는지 전 국민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의료급여 기본계획의 경우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어, 이미 3년 전 결정한 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불투명과 비민주를 해결하기 위한 이재명정부의 방안을 묻습니다.

5. 이재명정부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묻습니다

- 코스피 5천에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서 가난한 이들은 12년 전과 같은 이유로 죽음을 맞고, '찾아도 지원하지 않는' 제도 속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더 까다롭게 개편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12년 전 송파 세모녀 뿐만 아니라 불과 11개월 전 긴급복지지원제도 거절을 겪은 이의 죽음도 잇은 듯합니다. '기본사회'를 말한 이재명정부는 고작 수개월에 불과한 임시적 지원 대책인 긴급복지지원제도조차 후퇴시키는 사회인지 묻습니다.

- 가장 가난한 이들이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는 단 한명의 기본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이재명정부의 정책과 지향은 무엇입니까?